

[선진국 전략]

김성근

sungkeun.kim@miraesasset.com

조윤경

yoonykyung.joh@miraesasset.com

Global Equity Issues

민주당 전당대회와 해리스 트레이드

-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 공개
- 해리스 공약의 핵심은 물가 안정: 에너지, 식품 가격, 주거비, 약값 안정에 초점
- 트럼프 공약과 비교시 가장 차별화된 분야는 에너지. 주택 건설도 수혜 기대
-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친환경 에너지, 주택 건설), 피해(식품, 소매, 일부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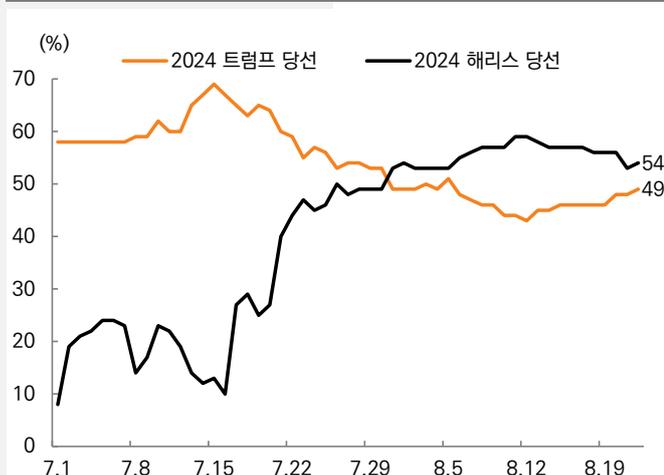
11월 대선 점검: 대통령은 50:50,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불투명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공식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 부통령의 상황은 긍정적이다. 전국 지지율은 트럼프를 앞지른 상태이고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차이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가 7개의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지율을 잃고 있다. 특히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19개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를 빼앗길 경우 대선 판도는 해리스에게 상당히 유리해진다.

지지율과는 별개로 시장은 아직 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50:50으로 보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7월 중순 고점이었던 69%에서 내려온 49%를 기록하고 있고, 해리스 당선 가능성은 54%로 평가했다. 해리스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왔지만,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유의미한 격차를 내지 못한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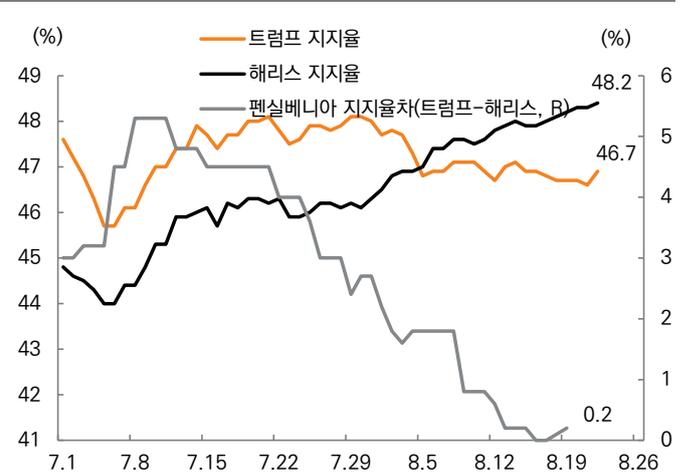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분간 각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주식 시장도 반응할 전망이다. 7월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 전개된 트럼프 트레이드가 대표적인 예다. 향후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올라온다면 '해리스 트레이드'도 개시될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공개된 해리스의 공약을 살펴보면 수혜 및 피해 업종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지지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핵심 이벤트는 9월 10일에 예정된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의 첫 토론이다.

그림 1. 베팅 시장에 반영된 트럼프-해리스 당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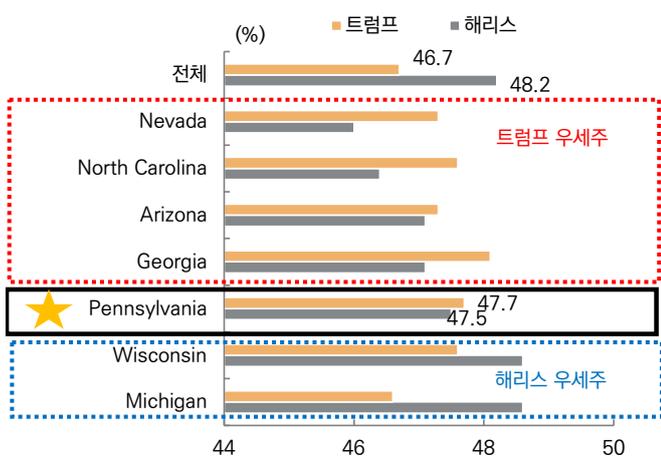
자료: Predicti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그림 2.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해리스



자료: RealClearPoli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그림 3. 경합주별 지지율



자료: RealClearPoli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그림 4. 11월 미국 대선 경과 및 일정

날짜	이벤트	세부 사항
6/27	대선후보 1차 CNN TV 토론	트럼프 당선 확률 60%로 상승
7/13	트럼프 피격 사건 발생	트럼프 당선 확률 70%로 상승
7/15~18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
7/21	바이든 후보 사퇴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 지지율 상승
8/19~22	민주당 전당대회	해리스 캠페인 공약 발표
9/10	대선후보 2차 TV 토론	민주당 후보 교체 후 첫 TV 토론
10/1	부통령 후보 TV 토론	월츠, 밴스 부통령 후보 첫 TV 토론
10월 중	대선후보 3차 TV 토론	양 후보 캠페인에서 협의 중
11/5	미국 대선	상하원 선거 동시 진행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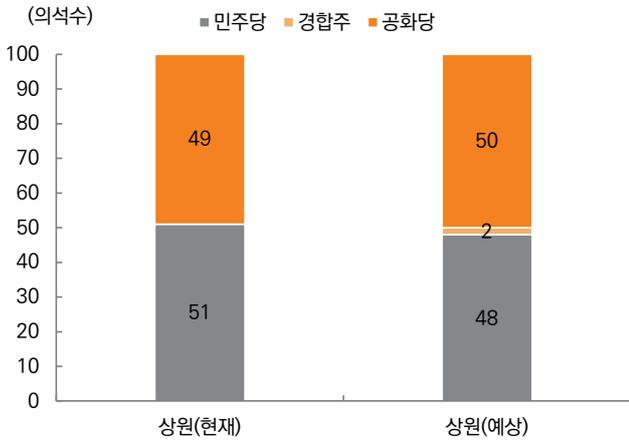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 구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복지 지출 확대 및 증세를 비롯한 각종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장악이 요구된다. 행정명령이나 규제 변화로도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분야가 있지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우선 상원 선거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원의원들의 임기는 6년인데, 100명의 모든 상원의원들이 6년마다 한번에 선출되지는 않고, 2년 주기로 의석수의 3분의 1이 투표 대상이다. 이번 2024년 선거의 경우 34석에 대한 선거가 진행된다.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하다. 34석 중 경합주에서 2석이 선거 대상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2개 선거에서 모두 이겨야 50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경합주 중에서 몬태나주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5%p 수준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몬태나주 자체가 2020년 트럼프를 지지한 공화당 색채가 강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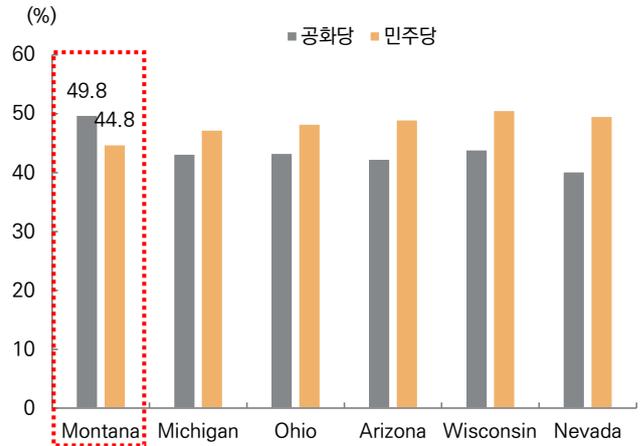
반면 하원에서의 상황은 아직 불확실하다.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과 달리 하원의원은 인구 수에 비례한다. 인구가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하원의원이 많은 이유다. 하원의원당 약 70만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어 총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소폭 앞서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이가 0.3%p 수준으로 크지 않다. 하원 선거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대통령 정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현재 상원 상황 및 예상되는 상원 선거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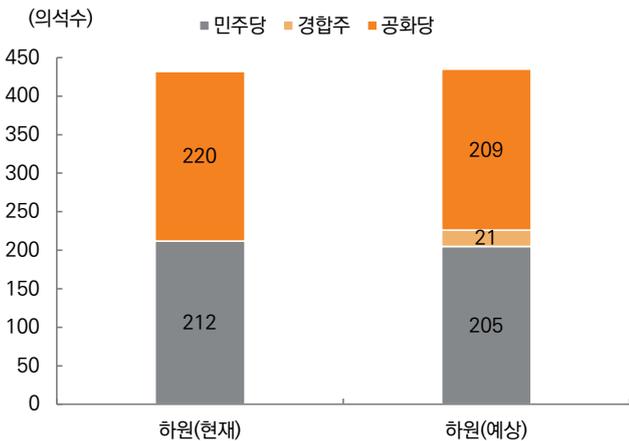
자료: 270toWi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그림 6. 상원 선거 경합주별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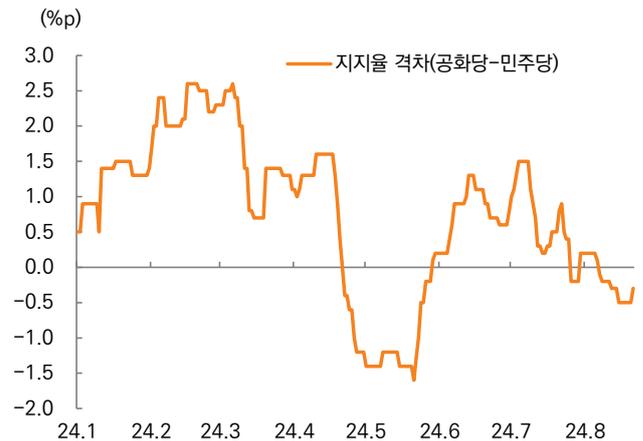
자료: RealClearPoli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그림 7. 현재 하원 상황 및 예상되는 하원 선거 구도



자료: 270toWi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그림 8. 하원 선거: 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소폭 우세



자료: RealClearPoli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8/22일 기준)

상하원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상하원 모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매해 통과시키는 예산안을 비롯해 연방 정부의 자금이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양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 통과에 있어서 상하원은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자만의 역할도 존재한다. 상원만이 가진 권한은 행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승인할지 정하는 역할이다. 취임 초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들 모두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연방법원과 연준이사들도 상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상대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경우 정책 집행에 필요한 인사들 임명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외교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원만의 핵심 고유 권한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 제출이다. 2019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이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정치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1월 6일 의사당폭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해리스의 경제 정책 공약: 가격 안정에 초점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공개한 공약과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공약들을 종합해 보면 핵심 정책은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감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체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높아진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 방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미 높아진 물가를 다시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해리스와 민주당은 향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크게 네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1)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2) 식품 기업들과 소매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price gouging)을 제한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3) 신규 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4) 처방 약값을 인하해 미국인들의 의료 부담감을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외교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하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같은 지원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

표 1. 민주당 공약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 및 수혜/피해 분야

정책 분야	정책	정책 방향	상원(공화당) 영향	수혜/피해 분야	매크로 변수
물가 부담완화	친환경 에너지	-IRA 정책 유지.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유지 -배기가스 기준 강화 기조 유지. 2030년까지 신차 중 50% 전기차 목표 -높은 전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 가속화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으로 전력 비용 부담감 낮추기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규제 유지. 휘발유 가격 담합 및 과도한 인상 방지	의회 동의 불필요	수혜: 친환경 에너지, 전력 장비 피해: 원유 인프라	전력 가격 하락→인플레이션 하락: 금리, 달러 하락
	식품 가격 인하	-식품 및 식품품 가격 인상에 대한 최초의 연방 금지 조치 추진 -대기업의 소비자 부당 착취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FTC와 주 검찰총장의 규칙 위반 회사 조사 및 새로운 권한 확보	의회 동의 불필요	피해: 식품, 소매점	역효과 가능성: 공급 부족 유발
	주택 공급	-향후 4년 동안 주택 공급 부족 종식 위한 3백만 신규 주택 건설 촉구 -미국인 임대료 인하 및 임대인 가격 인상·조작 방지 조치 시행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25,000의 계약금 지원 제공	상하원 승인 필요	수혜: 주택 건설	
	처방약 가격 인하	-미국인 인슐린 비용 35달러 제한·처방약 본인 부담금 2,000달러 제한 -ACA(메디케이터), 메디케이드 범위 확장 -제약회사 담합, 소규모 약국 압박, 비용 인상 등의 부당 관행 단속	상하원 승인 필요 (의료보험 범위 확장)	피해: 제약(인슐린)	
외교	동맹 관계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협력 지속 및 가자지구 휴전 협상 지속 -NATO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국방력에 대한 투자 지속. 장비 현대화 및 미국내 방산 공급망 확충	의회 동의 불필요 외교 조약(상원)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상하원 동의 필요		가자지구 휴전 협정→유가 안정
제조업 및 인프라	미국 제조업 육성 공급망 리쇼어링	-AI,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첨단 재료 등의 미래 분야에 투자 계획 수립 -인프라투자법 기반한 미국내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속 -노동 조합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 생성 정책 지속 -생물보안법 통과로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증진 -중국 첨단 기술 규제 및 Chips Act를 활용한 핵심 기술 공급망 리쇼어링 정책 유지	신규 인프라 예산에는 상하원 승인 필요 기존 정책 유지에는 불필요	수혜: 산업재 (제조업 장비), 인프라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플레이션 영향 제한적 금리, 달러 영향 제한적
재정 정책	증세·복지 확대	-조세 피난처 종식 및 법인세 인상(21%→28%) -자녀에 주는 세금 공제 혜택(CTC), 저소득층 대상 지원(EITC) 확대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 자본소득세율(기존 20%)과 임금 소득세율 일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부담 없도록 조치	상하원 승인 필요		재정적자 규모 확대→금리 상승 요인
이민	합법적 이민 유도	-1기에 통과하는데 실패한 이민개혁안 통과 시도. 국경 안보 투자 강화 -불법 이민자는 차단, 합법적 이민자 유입 유도. 기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합법화 시도	행정명령으로 가능 강한 효력을 위해서는 상하원 동의 필요		인플레이션 상승→금리, 달러 상승

자료: democrats.org, kamalaharri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 물가 안정 공약

1) 에너지 가격: 친환경 에너지(ICLN ETF), 전력망(PAVE ETF)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증진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생각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시행한 업적들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새롭게 투자할 분야도 부각시켰다. 우선 IRA는 계속 이어갈 계획을 내비쳤다.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7,500달러의 보조금 정책도 계승할 계획이다. IRA 발표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작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더 뛰어난 단열재, 창문 같은 부품 교환을 촉진해 가구당 연간 2,0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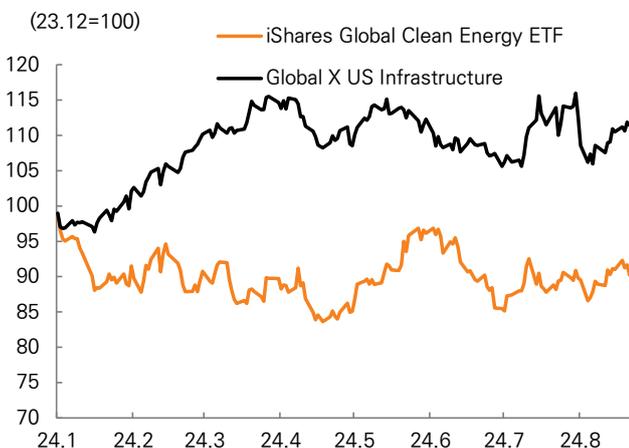
친환경 에너지 공급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4,000억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앞으로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신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을 단순화 시키는 한편, 전력망 투자를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전력망 캐파 부족으로 인해 전력망에 연결을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상당한 상태다.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송전 라인을 구축해 이와 같은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 약값 인하: 소비자들의 헬스케어 비용 낮추기

헬스케어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을 계승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뇨병 처방에 쓰이는 인슐린 가격을 수백달러 대에서 35달러로 낮췄는데, 해리스는 공공 의료보험(메디케어)의 협상력을 활용해 다른 처방약 가격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훨씬 저렴한 복제약(generic drug)의 보급도 서두르고, 제약회사들의 담합 활동 및 과도한 가격 인상과 같은 행동을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의 가입자수도 더 늘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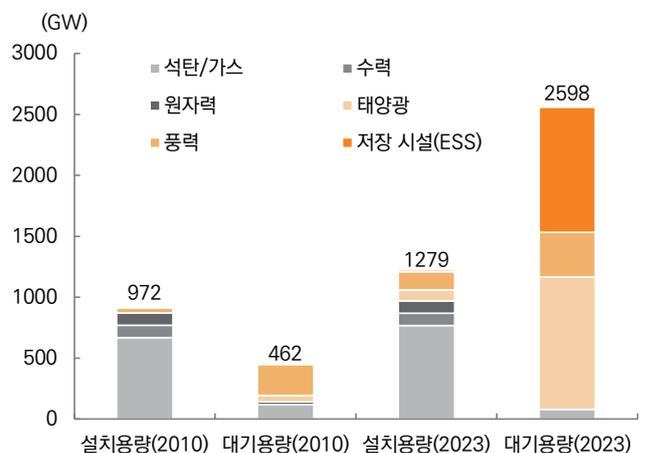
약값 인하 압력이 거세진다면 제약사들의 영업 마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메디케어 가입자수는 약 6천5백만명으로 미국인들 중 일부만 커버하고 있지만, 협상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그림 9. 친환경, 전력망/인프라 ETF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전력망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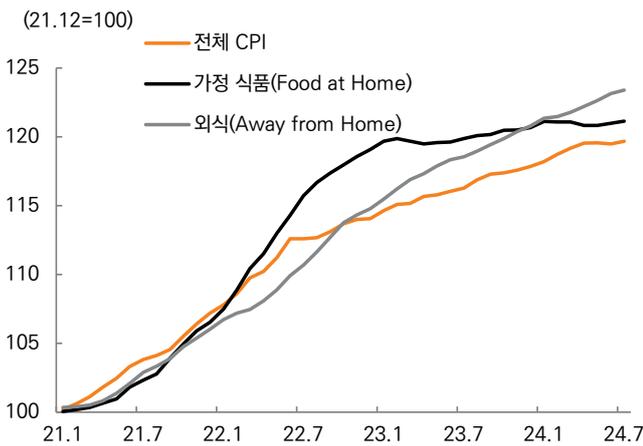
자료: Berkeley La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 가격 통제: 식품 기업, 소매점들에 피해 예상

해리스 부통령은 직접적인 가격 제한 조치도 공약했다. 식품 생산 기업들과 소매 기업들의 'Price-gouging' 태도를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Price-gouging은 기업들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1년부터 22년 사이 당시 식품 기업들, 소매점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행위를 인플레이션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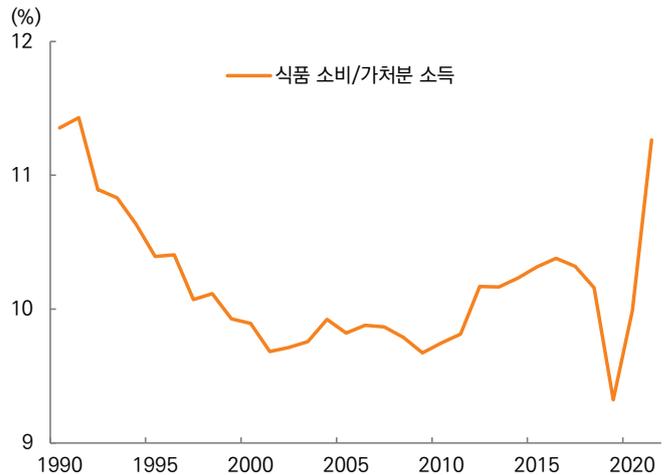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단속해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FTC(연방무역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강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음료 생산 기업들과 소매점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가격을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게 되면 영업 마진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도한 가격 인상'의 범위가 자칫하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실제로 해당 공약이 발표된 이후 관련 기업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몬델레즈와 월마트는 이미 기업차원에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림 11.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식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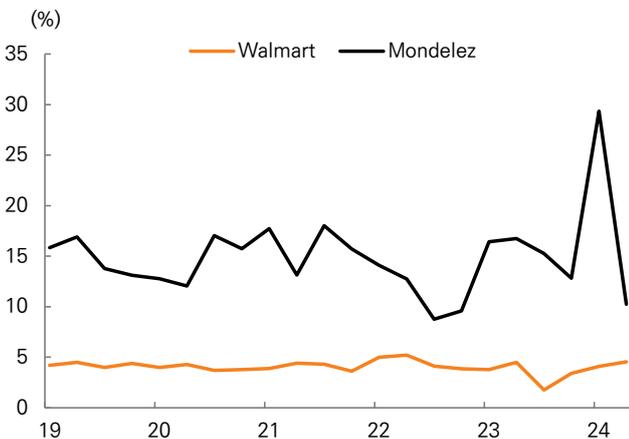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미국인들의 식품 소비 비중은 30년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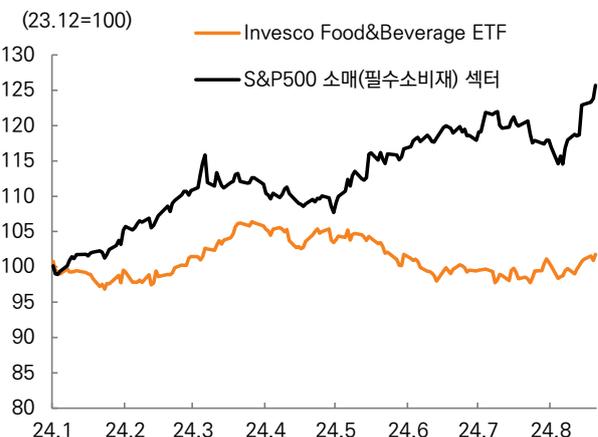
자료: USD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식품, 소매 기업들의 영업 마진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식품, 소매기업 ETF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4) 주택 공급 확대: Homebuilder 기업들에게 유리

해리스는 앞으로 4년간 3백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감을 낮출 계획이다. Zillow에 의하면 미국내 공급 부족 규모는 4.5백만 가구로, 공약대로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면 주택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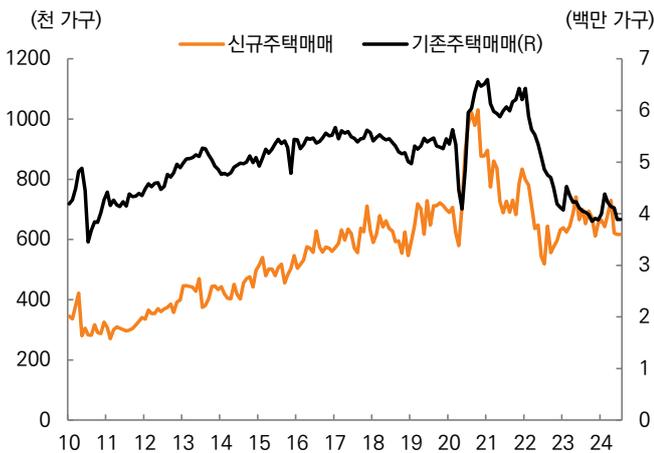
주택 건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규 주택 건설 활동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저가 임대형 주택을 짓는 기업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은 더 확대한다. 또한 4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 저가형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건설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속도도 가속화 시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를 주거용 공간으로 변형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확보에 나선다.

공급 확대 공약은 주택 건설(Homebuilder) 분야 기업들에게 긍정적이다. 주택 건설 기업들은 연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정책적 도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한때 7%가 넘었던 모기지 금리도 내려오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더 활발해 질 수 있다. 모기지 금리는 최근 6%대로 소폭 낮아졌지만 주택 매매량은 여전히 정체된 상황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수요 진작 정책도 준비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25,000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40만명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했지만, 대상 구매자들의 범위를 넓혀 최대 4백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관련해 SPDR S&P Homebuilder ETF(XHB)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에 초점을 맞춘 건설사들을 비롯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15. 저조한 주택 매매 활동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내려오기 시작한 30년 모기지 금리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재정 정책: 증세와 복지 확대

재정 측면에서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추가 비용을 메우기 위한 증세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녀에 주는 세금 공제 혜택(Child Tax Credit)을 기존 2,000 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시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 규모가 6,000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EITC) 앞서 서술한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도 확장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복지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메꾸기 위해 증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미국의 자본 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1년 이상 장기 보유시 2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 소득층 관점에서는 임금 소득세율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현상을 사실상 고소득층에 주는 세제 혜택이라고 보고, 자본 소득세율을 임금 소득세율에 맞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예외다. 중소기업청(SBA)는 2030년까지 50만개의 중소기업에 2,5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금 지원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증세 정책은 당장 실행하기 보다 2025년말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말에 트럼프의 감세 법안(TCJA)의 효력이 만료되어 양당간 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협상에 실패해 감세 법안 효력이 만료된다면 법인세는 35%로 회귀하고, 최고 소득세율은 현재 37%에서 39.5%로 돌아가게된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 모두 재정 적자를 확대해 부채 관련 우려를 키울 여지가 존재한다. 23년 말 기준으로 미국 부채 비율은 GDP의 122%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도 6%를 상회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21%에서 15%),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면제인데, 이 두가지 공약으로만 각각 4600억달러, 1.7조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생각이지만, 사회보장제도, 국방 예산을 제외하면 지출을 줄일 공간이 부족하다.

그림 17. 미국 부채/GDP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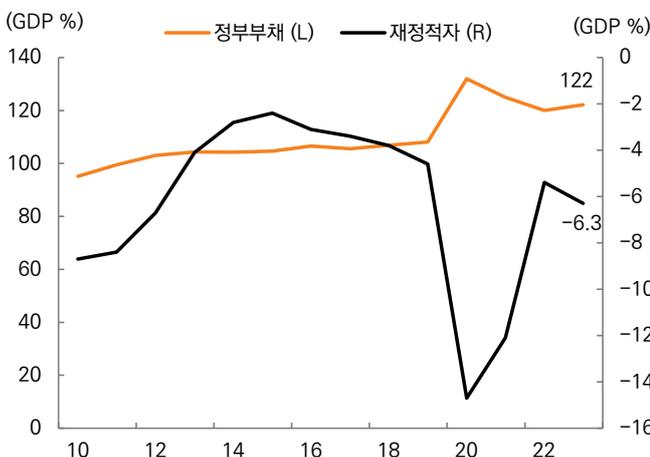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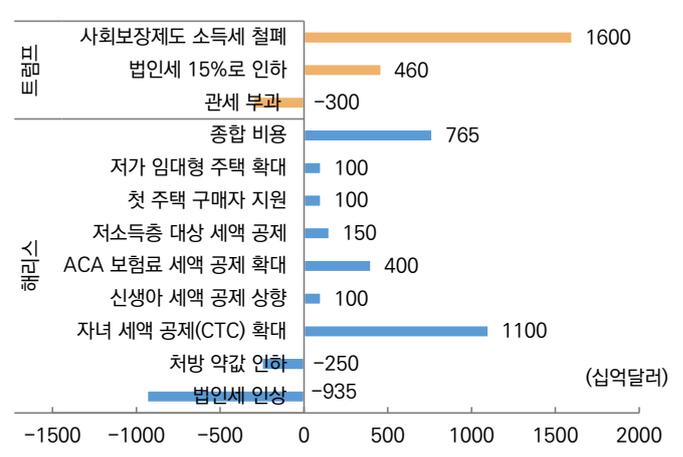


그림 18. 공약별 재정 적자 규모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Tax Foundation, CFR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해리스와 트럼프 정책 비교: 에너지에서 차이점 부각, 제조업은 유사

해리스 공약과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부각되는 분야는 에너지와 재정 정책이다.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생산도 늘려서 일단 총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인 반면, 해리스는 에너지 생산은 친환경 수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통된 생각을 가진 분야는 제조업이다. 두 후보는 달성 수단은 다르지만 미국내 제조업을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활용해 기업들이 최대한 미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해리스는 관세는 특정 핵심 분야에만 사용하고 보조금을 활용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생각이 일치한다. 제조업을 육성해 미국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를 이어가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두 후보 모두 확장 재정정책을 공약하고 있어 25년 이후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재정 적자 확대는 미국 부채 관련 우려를 자극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23년 부채협상에서는 신용 평가사의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며 금리 변동성을 자극했다.

표 2. 해리스와 트럼프 공약 비교

	해리스 친환경 에너지, 증세와 복지 확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감세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에너지 생산 증진: IRA 유지 화석 에너지 규제 유지: 차량 배기가스 규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생산 증진: 석유, 가스 등 모든 에너지원 동원 환경 규제 완화: IRA 폐지, 배기가스 규정 폐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정책 확대: 약값 인하 정책, 주택 구입 지원 증세 정책 추진: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세 정책 강화: 법인세 21%에서 15%로 인하 사회복지연금 및 국방 예산 제외한 지출 축소
외교/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 관계 강화: 동맹 관계 활용해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지원, 가자 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O, 동맹국에게 국방비 부담 전가 우크라이나 휴전 추진, 이스라엘 지원에는 긍정적
무역/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제조업 육성: 인프라 법안 유지 및 강화 핵심 기술 공급망 리쇼어링: Chips Act 유지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 견제 강화: 대중 관세 60%로 상향 미국 공급망 강화: 관세 부과로 제조업 시설 유치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이민 제한: 이민개혁법 통과 재시도 합법적 이민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기존 불법 이민자도 추방: 미국내 1,500만명이 대상
수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에너지, 전력 장비 산업재(제조업 장비 및 로보틱스) 주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방산(미국) 산업재(제조업 장비 및 로보틱스)
피해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 에너지, 석유 파이프라인 식품, 소매, 일부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매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 가격 제한 같은 조치는 역효과 유발 가능 관세 사용 제한된 무역 정책: 인플레이션 영향 제한적 재정적자 규모 확대는 금리 상승, 달러 약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요인.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둔화 재정적자 규모 확대는 금리 상승, 달러 약세 요인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